"광주시의원 4명 윤리위 회부"

비리·성폭행·폭력 연루 의혹 의원…28일 징계 방안 논의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주민의 대표로서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가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남일 의원 ▲성폭행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K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송모(51·서구 1)·전모(43·북구 3) 의원 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안건을 윤리위에 정식 회부하며, 윤리위는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시의원 윤리강령과 이를 위반한 의원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윤리위가 소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광주·전남 52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영진 국회의원 등에게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K의원, 김남일 의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K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산물 '관세 상한제' 도입 반대 공조 강화

DDA 각료회의 개막

정부의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 대표단이 21일 개막되는 주요국 각료회의에 대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수석대표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오후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이번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대표단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이날 오전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 각료회의에 이어, 오후에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 각료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그룹별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G33 각료들은 이날 회의에서 개도국 특별품목 중 관세감축 면제 품목수 확대와 함께,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SSM·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고안된 제도)와 관련해 우루과이라운드(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는 품목수의 확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차관은 "아직도 농업그룹 자유화 세부원칙 수정안이 회원국 대다수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명시적인 관세 상한의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는 21일 152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각료회의에 이어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이 참가하는 '그린룸회의'를 잇따라 열어 농업과 비농산물(NAMA), 서비스 분야 등에 관한 자유화 세부원칙 협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무현 前 해수부장관 구속

수뢰 혐의…참여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1일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 전 장관을 구속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장관급 인사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강 전 장관)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중견 해운사 D사 등 6-7개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원씩, 모두 7천만-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운사들이 해양부 공무원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관리하면서 조직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다 강 전 장관의 부인이 수천만원 대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자금 추적 끝에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이 해운사들로부터 유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과 다투지 않아 오후 3시에 시작된 심사는 불과 40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다른 해양부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중 일부 인사가 해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지역출신 의원 릴레이 인터뷰

정두언 의원

"호남 민심 전하는 심부름꾼 되겠다"

"전남 동부권은 2012년 여수엑스포개최를 계기로 하고, 서부권은 서남권 개발과 '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J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광주 출신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서대문 을·51〉은 21일 "광주·전남이 잘 살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기도 하는 정 의원은 "국회에 구성될 여수엑스포지원 특별위원회에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들이 실질적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한나라당에 호남 지역구 의원이 없으므로 여당과 정부에 호남의 현안과 민심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아가 "서남권특별법의 제정은 서남권개발 사업의 시작이니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관련, "이 사업의 성공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고 성공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체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대해서도 정 의원은 "이 사업은 J프로젝트와 동반 추진되면 지역산업과 관광 등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관련 지원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친가, 외가, 처가 모두가 광주·전남 출신으로 부친 선영도 광주댐 위 무등산 자락에 있다. 또 큰아버지인 정성태 전 의원은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내리 여섯 번이나 했으며 어렸을 때는 광주의 외삼촌집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약력 ▲서울대 무역학과 ▲행정고시 24회 ▲국무총리 정보·공보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17·18대 국회의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문화예술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보좌역

국회의원 후원금 '톱10' 한나라 싹쓸이

1위는 박근혜 의원…'부익부 빈익빈' 심화

올들어 지난 4월29일까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기부된 300만원 이상 고액 정치후원금 현황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의 기대감과 예비 집권여당 프리미엄 등에 힘입어 한나라당 출신들에게 고액 후원금이 집중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300만원 초과 후원금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후보자들이 받은 규모가 79억6천325만2천원(55.8%)으로 전체(142억6천547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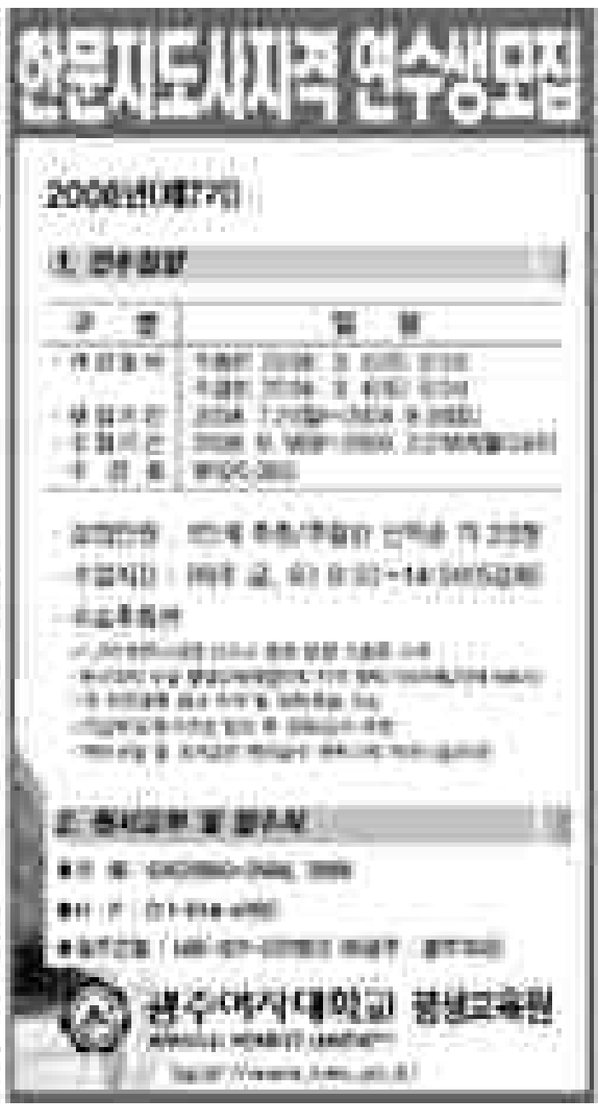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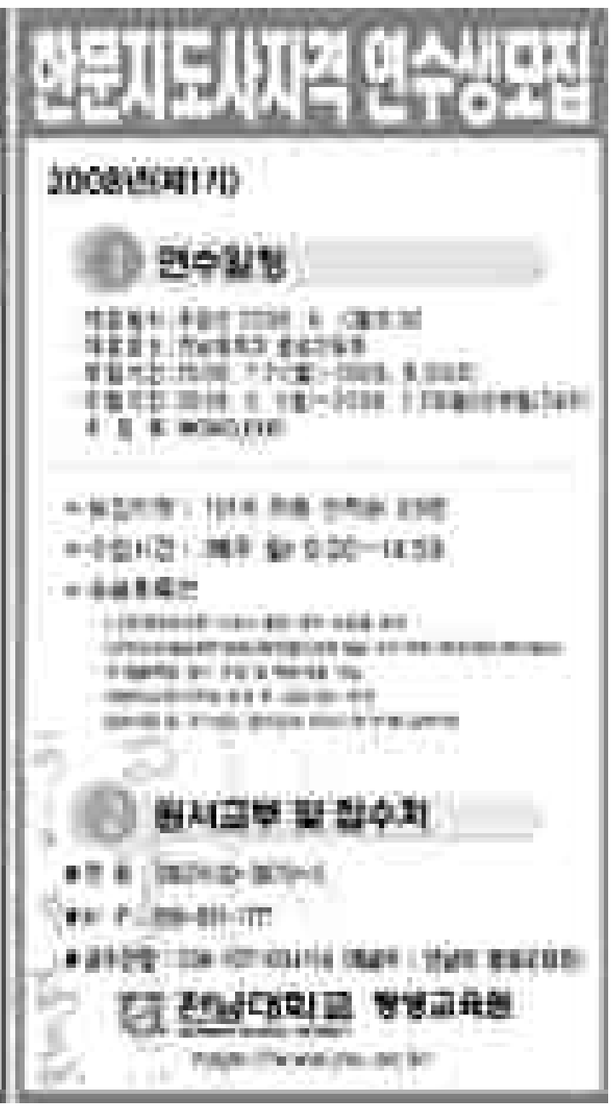
민주당은 35억567만8천500원으로 뒤를 이었지만 비율은 24.9%에 그쳐 야당으로 전락한 신세를 절감했다.

1인당 후원금 모금액도 한나라당이 4천83만7천190원으로 민주당(2천500만8천478원)을 크게 웃돌았다.

모금 현황을 개인별로 보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억7천6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총선 당시 친박 무소속 연대였던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면 '톱 10' 모두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다.

2위는 박 전 대표의 측근인 김무성 의원(1억5천만원)이 차지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1억2천900만원)이 3위, 박 진·남경필 의원이 1억2천800만원으로 공동 4위에 각각 올랐다.

후원금 모금액 1억원 이상에는 친박계인 허태열(1억300만원), 김학송(1억원) 의원까지 합해 총 12명이었으나 민주당 출신은 없었다.

후원금 액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93명으로 전체(491명)의 18.9%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59명 ▲민주당 23명 ▲자유선진당 2명 ▲친박연대 1명 ▲무소속 8명 등이었다. 한나라당 출신이 3명 중 1명꼴인데 반해 민주당 출신은 6명 중 1명꼴에 그쳤다.

민주당 출신만 놓고보면 임종석(9천350만원) 전 의원, 우윤근(9천만원) 의원, 이인영 전 의원(8천982만원), 원혜영 원내대표(8천796만원), 정세균 대표(8천130만원) 등 순서로 나타났다. /연합뉴스